※ 환경부, '민원처리전담제' 첫 도입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민원을 관련 전문가가 도맡아 신속히 처리해주는 '민원처리전담제'가 환경부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환경부는 최근 인터넷 사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재택근무 형식의 '민원처리전담제'를 도입했다고 지난 2월 23일 밝혔다.

환경부의 민원처리 전담제는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부 출신 공무원 중 업무능력이 우수한 유휴인력을 전담요원으로 뽑아 사이버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산업폐기물과와 대기관리과의 민원을 처리할 유급인원 2명을 선발했다.

환경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은 집에서 근무하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을 수시로 확인한 뒤 답변서 초안을 작성, 이메일로 환경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된다. 담당 공무원은 초안에 대한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인의 질의에 회신하게 된다.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2개월 동안 민원처리전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산업폐수과와 생활공해과의 민원을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뽑는 등 이 제도를 확대실시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월 평균 1천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산업폐기물과와 대기관리과, 산업폐수과, 생활공해과 등 4개 부서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환경부는 최근 인터넷 사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재택근무 형식의 '민원처리전담제'를 도입했다고 지난 2월 23일 밝혔다.

※ 정부, 2003년까지 환경산업에 2조원 투자

오는 2003년까지 환경산업(ET)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등 환경산업이 중점 육성된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산업을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기부와 산자부, 농림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2001~2003년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지난 2월 21일 밝혔다.

환경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환경기술개발 및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 등에 5천9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2003년까지 총 1조9천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관부처별로 ▲21세기형 환경기술 중점 개발 ▲국내환경시장 수요창출 ▲환경산업체 발굴 및 중점 육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정부차원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54개 중점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 착수(환경부), 청정생산기술 보급 종합계획 수립(산자부),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농림부),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개발 5개년 계획 수립(건교부),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공법 인증제도 도입(건교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소프트웨어 개발(환경부·산자부), 수소제조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점 개발(과기부)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여신 심사시 기업의 환경위험성을 반영하는 기업환경위험성 평가제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등을 5~10년 단위로 예고하는 환경관리기준예고 제도 등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세부전략을 바탕으로 3월 중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하는 한편 환경산업 발전기획단(단장 환경부차관)에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키로 했다.

정부는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으로 인해 환경질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년간 일자리 12만여개 창출, 기화변화협약 등 해외무역규제에 대한 능동대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www.konetic.or.kr) 24만 건의 정보 구축

환경부는 지난 한 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산업 기술정보 24만 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3월 2일부터 인터넷 종합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인력에 의한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추진되어 연인원 4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환경산업 · 기술정보 DB는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를 다시 특허정보 등 14개 전문분야로 세분하여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업체가 환경시설 설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이버컨설팅'을 마련하여 기업체에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며 법률개정, 환경기술, 환경뉴스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개인 E-mail 주소로 매일매일 제공하는 'E-mail posting' 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히 환경산업체의 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환경산업체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 관리하여 주며, '사이버환경전시관' 운영을 통하여 환경제품을 사이버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환경기술의 시장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상에서 구인, 구직자를 연결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마당'과 유휴환경설비 알선을 위한 '설비장터'를 마련하여 환경기술인력과 환경산업체 지원을 강화하며, 정보이용자간 정보교류를 위한 사이버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환경기술 정보망을 구축하고 사이버환경기술 교육

환경부는 지난 한 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산업 기술정보 2만 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3월 2일부터 인터넷 종합서비스를 개시했다.

환경산업 · 기술정보 DB는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를 다시 특허정보 등 14개 전문분야로 세분하여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환경설비 상품의 전자상거래시스템 등 관련 정보인프라 구축을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환경과 경제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폐유리병 생산자재활용 자발적 협약

환경부는 폐유리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동아제약 일양약품 등 34개의 유리병 사용업체와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각종 제품의 생산주체가 폐기물의회수 및 재활용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협약 체결에 따라 올해 폐유리병 재활용량은 지난 99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25만8천t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생산업체가 각 지방환경관리청에 납부하던 예치금이 면제돼 생산업체는 약 37억5천4백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앞으로 금속캔 타이어 등 다른 품목의 자발적협약체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환경부, 물절약투자대행업 제도 도입

환경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물절약투자대행업(WASCO) 제도가 도입됐다.

환경부는 현행 절수시설 설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물절약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물절약투자대행업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3월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투자대행 업체가 절수시설 설치비용을 먼저 투자하고, 절수시설 설치에 따른 절수 이익금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다. 환경부는 물절약 산업의 규모를 연간 4천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절수시설 및 중수도 설치 등 민간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부문에도 물절약투자대행업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시범적으로 노후관개량사업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관개량사업의 사업주체로는 한국수자원공사나 국내외 민간대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으로 물절약투자대행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절약투자대행우수업체'를 선정, 금융지원을 해 주는 등의 물절약투자대행업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 지하수 오염자에 정화의무 강제 부과

앞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는 자기비

국민총생산에 환경오염 등을 반영하는 녹색GDP(국내총생산량)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중장기기본계획이 오는 6월까지 확정된다.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계청, 한국은행 등과 녹색GDP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4월안으로 전문 추진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용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정화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 지하수법에 따르면 주유소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오염예방을 위한 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관측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수질이 환경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을 유발한 시설 관리자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오염정화계획을 세워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 '녹색GDP' 중장기계획 6월 확정

국민총생산에 환경오염 등을 반영하는 녹색GDP(국내총생산량)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중장기기본계획이 오는 6월까지 확정된다.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계청, 한국은행 등과 녹색GDP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4월안으로 전문 추진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추진팀은 통계청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계정, 환경보호지출계정 등의 작성이나 기법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추진팀이 녹색GDP 도입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5월까지 마련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환경분쟁조정 신청원인 78%가 소음·진동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소음·진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발간한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조정건수 401건 가운데 77.8%인 312건이 소음·진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조정건수의 원인은 대기오염 47건(11.7%), 수질오염 33건(8.2%), 해양오염 9건 (2.2%)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조정건수 70건 가운데 소음·진동이 84.3%인 59건을 차지했다. 피해내용 별로는 정신적피해 122건(30.4%), 건축물피해 91건(22.7%), 축산물피해 79건(19.7%), 농산물피해 40건(10%) 등의 순이었다.

※ 산자부, 6대 대체에너지 집중 개발

산업자원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등 6대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자부는 이 방안에 따라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2003년까지 국산화하고 설치비 보조, 발전전력 매입 등을 통해 2006년까지 주택 1만가구에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2003년까지 750kW급 풍력 발전시스템을 개발, 발전단가를 현재의 kWh당 100원에서 70원 이하로 낮추고 앞으로 선진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1MW급 이상의 대형발전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 재활용시설 600억 지원

재활용시설확충, 기술개발지원에 올해 총 600억원 규모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지원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지난 2월 21일 영세한 국내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히 금년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유통·판매지원자금을 신설,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할 예정이며 시설 및 기술개발에 450억원, 경영안정지원에 100억원, 유통·판매지원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시설 및 기술개발의 경우 3년거치 7년 상환, 경영안정 및 유통·판

매지원은 2년거치 3년상환조건이며 대출금리는 7.0%이다.

융자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한국자원재생공사 본사 및 전국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773-9782~9)

※ '수돗물 주식회사' 생긴다

2~3년 뒤부터 '팔당호 상하수도 주식회사' '낙동강 수도회사' 등과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시민을 상대로 수돗물 장사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4일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와 관리사업을 2~3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에서 손을 떼고 대규모 민간 상하수도 회사가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등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특히 각 시 · 군이 따로 맡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한강 · 낙동강 등 유역단위로 광역화해 한 개 회사가 운영토록 할 구상이다.

※ 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을 전면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유역 단위로 광역화하여 단일 민간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회사가 소유 운영권을 갖는 완전 민영화 방안 등을 종합검토 추진키로 했다.

그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단위 위탁에 의한 소규모 업체 난립과 이에 따른 전문성 결여, 민간위탁 대신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립에 의한 경쟁제한 등 민영화 취지 왜곡, 민영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경험 부족 등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 환경부, 폐자원활용 캠페인 전개

고유가시대를 맞아 폐지 고철 등 폐자원 재활용율을 높히기 위한 전국 폐자원수집처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재활용율이 1% 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연간 687억원의 외화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과 이달 중민간단체, 시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등과 합동으로 폐지 고철 캔 PET용기 등을 대상으로 폐자원수집처리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8개공단 폐수처리장 건설

환경부는 총 733억1천만원을 들여 군장공단등 전국 8개 공단지역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신규 건설키로 했다.

지난 3월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8개 공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신규 확충, 지자체별 시설계획에 맞춰 1 · 4분기중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고 상반기안에 시설공사 발주를 마무리짓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단폐수처리장 신설을 통해 산업폐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부영양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폐수종말처리율을 지금의 78%에서 오는 200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현재 단지개발이 한창인 군장공단의 경우 입주업체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폐수처리기능을 조기에 확충키로 하고 오는 2004년까지 하루처리 3만톤급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신설하는데 총 2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또 76억2천만원으로 통영 안정공단에 시설용량 5천7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오는 2003년까지 건설키로 했으며 파주 금파단지에는 16억원을 들여 하루처리 6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연말까지 확충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경남 함안 칠서공단에 질소 · 인등 부영양화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오는 2002년까지 확충키로 하고 사업비 78억8천만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전남 동광양공단에는 9

환경부는 총 733억1천만원을 들여 군장공단등 전국 8개 공단지역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신규 건설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8개 공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신규 확충, 지자체별 시설계획에 맞춰 1 · 4분기중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고 상반기안에 시설공사 발주를 마무리짓도록 했다.

억3천만원을 들여 하루처리 2천600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연말까지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전남 여천, 전북 익산등 2개 공단에 18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소규모 탈취전용시설을 금년말까지 건설키로 했으며 대구 남천공단내 공동탈취시설 설치에 2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 작년 환경오염신고 하루평균 318건

지난 한해 동안 하루 평균 318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0년 환경신문고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설치된 환경신문고(☎ 128)를 통해 총 11만6천24건(하루평균 318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됐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하루 평균 318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0년 환경신문고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설치된 환경신문고(☎ 128)를 통해 총 11만6천24건(하루평균 318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됐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 30만㎡ 이하 재개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부지면적 30만㎡ 이하의 재개발 등 서울시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정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 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대상을 올 8월까지 확정지어 조례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제정으로 법상 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 · 교통 · 인구 등에 대해 영향평가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0만㎡ 이하의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폭 25m 이상 도로의 2㎞ 이상 신설 ▲2차로 이상 도로의 5㎞ 이상 확장 ▲일일 50t 규모 이상 처리용량의 폐기물 시설 등도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 에너지 · 환경기술 전문 창업보육센터 개소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손재익)은 지난 2월 23일 국내 에너지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술촉진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에너지연은 이번에 개소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대해 회의실과 접견실, 홍보관, 홈페이지 등의 기본 시설과 기술 · 경영 ·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열사용기자재와 성능시험장비, 엔진성능시험장비, 연료분석 및 일반화학시험장비, 에너지기자재의 열적특성 분석장비 등 약 1천여 점의 고가 첨단장비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이 보육센터에는 ㈜씨에프텍(대표 정동규) 등 환경 · 대체분야 11개 전문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민자 유치키로

전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등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19일 캐나다의 SNC-LAVALIN사와 금호산업㈜이 공동제안한 환경기초시설 사업계획을 받아들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전북도 민자사업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민간 사업자는 새만금호 상류의 수질보전을 위해 분뇨처리장 등 23개 신규사업을 벌이고 축산폐수처리장 등 4개소의 기존시설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되며 총사업비 3천43억원 중 30%를 부담한다.

공사기간은 내년 7월부터 3~4년간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군산, 익산, 김제 등 6개 시 · 군으로부터 하수처리비용을 받게 된다.

※ 하수슬러지 소각장 경북 4개권역 설치

경북도는 해양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2003년까지 동 · 남 · 북 · 중부의 4개 권역 으로 나눠 400억원을 투자, 하루 100t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4기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하수 슬러지의 육상 매립이 2003년 7월 이후 전면 금지되고 해양투기도 런

던협약 등에 의해 국제적인 금지추세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가 시급해졌기 때문.

※ 인천시, 2002년까지 대기환경 개선

인천시는 내년 월드컵개최 이전까지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市)는 지난해 연간 0.024ppm이던 이산화질소(SO_2기준치 0.05ppm)의 농도를 올해 0.023, 내년 0.022ppm으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또 작년 연간 53㎍/㎥인 미세먼지(70㎍/㎥) 농도를 내년에 51㎍/㎥로 줄이고, 작년 0.019ppm인 오존(O_3,0.06ppm) 농도를 올해는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2002년에 0.018ppm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취약지역 · 사업장별 개선대책 마련 추진 ▲취약지역별 민간 모니터링제 실시 ▲수도권 대기오염 측정망 연결 구축 등 대기오염 감시기능 강화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월드컵경기를 대비, 오존종합상황실 운영 및 먼지 · 오존경보제 운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한국전력기술, 질소산화물 제거 촉매 개발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2월 22일 호흡기 장애 산성비 등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촉매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이 회사는 이 촉매를 핵심 부품으로 하는 탈질 시스템을 발전설비나 대형 보일러를 가동하는 곳에 공급하는 등 상용화하기로 했다. 탈질 시스템은 보일러 등의 연소가스 배출구에 설치돼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수분으로 분해시켜 각종 공해를 없애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 서울시는 환경오염 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환경 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올해 2억21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한국전력기술 연구소 홍성호 박사는 "일본 독일 등에서 들여오는 외국산 질소산화물 제거 촉매는 2백50도 이상의 고온에서 탈질이 가능한 반면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1백50~2백도의 저온에서도 탈질처리가 가능해 에너지 소비량을 5%이상 절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산 촉매가 바나듐이나 티타늄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제품은 값싼 망간을 사용해 처리에 따른 비용부담도 기존방식보다 30%이상 덜 수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이 촉매의 국내 특허등록을 마치고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에도 국제 특허를 출원중이며 이들 국가에 수출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촉매 개발에는 경기대 홍성창 교수가 참여했고 촉매 제조는 매그린(대표 조성종)이 맡기로 했다. 홍 박사는 "환경 관련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탈질 시스템의 국내 시장 규모가 오는 2004년에는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31)289-3022

※ 서울시, 환경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나 자동차 매연 등 주변의 환경오염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환경오염 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환경 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올해 2억21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환경오염 신고 가운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총 3778건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액의 대부분은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폐기물무단투기 사례를 신고하면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20~8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또 자동차 매연 과대 배출에 대해서도 월 5~9회 신고자에게는 3000원짜리, 월 10회 이상 신고자에게는 5000원짜리의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한다.

※ 중금속 비산재 안전처리방법 개발

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비산재를 하수찌

꺼기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6일 쓰레기를 태우면 발생하는 비산재를 하수찌 꺼기 속의 미생물인 황산염환원균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발명, 지난해 12월 국내특허를 받고 현재 국제특허를 출원중이라고 밝혔다.

비산재는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특정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서 매립되더라도 중금속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침출수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물질.

보건환경연구원의 처리 방법은 이 비산재가 하수찌꺼기와 섞이면 하수찌꺼기 속의 황산염환원균이 비산재의 중금속을 녹지 않도록 금속황화물로 불용화시키는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냄새가 지독하고 물기가 많은 하수찌꺼기와 중금속 함유 침출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비산염의 안전한 처리를 상호보완적 특성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특정폐기물인 비산재와 일반 폐기물인 하수찌꺼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대로 이 같은 비산재 처리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6일 쓰레기를 태우면 발생하는 비산재를 하수찌 꺼기 속의 미생물인 황산염환원균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발명, 지난해 12월 국내특허를 받고 현재 국제특허를 출원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인터크론, 환경친화형 방청제 개발

천연 규사를 이용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공해를 막아주는 환경친화형 방청제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한국인터크론(대표 이성휴http://www.int-ercron.co.kr)은 순도 99.9%의 규석을 주원료로 사용, 인체에 무해한 수돗물용 규산염(폴리실리 케이트) 방청제인 「워터크리아」를 최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워터크리아는 특수 규산염 성분을 고온에서 가공한 결정체로 금속의 전기 화학적 이온작용에 의해 수도 배관내 스케일(녹) 형성과 부식을 방지, 각종 배관의 반영구적 수명연장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수질의 수소이온농도를 조정하며 미네랄을 함유,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 터론은 "이번 워터크리아 개발로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워터크리아 외에도 가정용 방청제 투입기인 「워터탱크」, 보일러용 청관제인 「실리-렉스」, 자동차 라디에이터용 방청제 「카제트」 등도 개발, 올해 안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2)786-3370

※ 949개소 오수처리시설 신설

경기도, 부산시 등 전국 23개 지역에 오수처리시설 949개소가 신설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보호구역내 분뇨 및 생활오수처리를 위해 올해 총 145억4천만원을 들여 부산시, 경기도등 전국 23개 지역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총 949개의 오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4분기중 지자체별 사업비 교부를 완료, 상반기중 시설발주에 나서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이들 지역의 생활오수를 BOD 20㎎/ℓ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우선 경기도의 경우 여주, 이천, 용인, 남양주, 가평, 광주등 6개 시·군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선정, 지역내 410개 영업장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국고 36억3천만원을 포함, 총 7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또 부산시 기장군내 오염물질 발생시설 176개소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키로 하고 사업비 6천700만원을 들이기로 했으며 2억1천만원으로 광주시 광산구와 강원도 평창군내 12개 영업시설에 고효율 정화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보은, 옥천, 충주등 충북지역 3개 시·군 108개 접객업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신설키로 하고 사업비 20억8천만원을 배정했으며 부여, 천안, 아산등 충남지역 3개 시·군 33개 영업시설에 고효율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5억8천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전북 정읍, 임실 등 2개 시·군 107개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18억9천만원을 투자하고 순천, 화순, 담양, 장흥군 전남지역 4개 시·군 84개소에는 14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김해, 하동등 경남지역 2개 시·군 19개 접객업소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총 3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 공해없는 폐기물소각로

고려소각로공업(대표 김향원)은 최근 소각재가 발생하지 않는 소각로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불균질한 폐기물을 열분해해 균질한 탄화물과 가연성의 가스형태로 바꾼뒤 이를 용광로의 코크스와 같이 1천300℃ 이상 고온에 연소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유해한 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소각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열분해 용융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용융 응고물은 골재나 원료로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고온상태의 연소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파괴돼 별도 다이옥신 처리장치가 없어도 환경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현재 개발된 시간당 100kg 처리용량의 열분해 용융 시스템에서는 특히 중형급의 소각로에서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32)817-5100

※ 양주군, 환경오염배출업소 기술지원

경기도 양주군은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제2기 민·관 합동 환경오염 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군(郡)은 대학교수, (사)경기북부환경관리인협의회 환경관리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환경오염기술지원반을 3월 중순부터 운영, 관내 오염원배출업체 1천412곳에 대한 오염원관리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 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환경 종합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환경청으로부터 대기측정망 12개소를 인수함에 따라 앞으로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기환경 종합감시센터를 설치, 4월말까지 환경청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5월부터는 시가 독자 운영키로 했다.

※ 대구시, 대기환경 종합감시센터 설치

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환경 종합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청으로부터 대기측정망 12개소를 인수함에 따라 앞으로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기환경 종합감시센터를 설치, 4월말까지 환경청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5월부터는 시가 독자 운영키로 했다.

※ 알알비, 분뇨·축산폐수 무방류 처리방법 개발

알알비(대표 김상동·박동혁. www.rrb.co.kr)는 분뇨로 액상비료를 만드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무방류 처리방법을 개발했다고 지난 3월 6일 발표했다.

회사측은 "지금껏 분뇨나 축산폐수를 비료로 만들 때 분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액체는 하수처리 했다"며 "하지만 이 공법은 액체까지 비료로 만들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처리법"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혁 대표는 "이 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비료에는 토양개량제인 질석 성분이 첨가돼 있다"며 "특허로 출원된 이 공법은 현재 울산시 분뇨처리장에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032)514-8761

※ 오에치케이, 슬러지 농축처리장치 국산화

환경설비제조 벤처기업인 오에치케이(www.ohk.co.kr 대표 남양원)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등 모든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농축·탈수하는 장치를 개발해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 흥협회가 주관하는 1·4분기 국산신기술(KT)마크 받는다.

오에치케이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약 3억 8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의 기술에서 처리가 가능했던 고농도 슬러지 뿐 아니라 하.폐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저농도 슬러지도 직접 농축·탈수한다.

또 기존 기술의 문제점인 여포막힘이나 세척수 과다투입, 소음 냄새 등의 문제도 해결했다. 경제성도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이 신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장치의 약

4분의 1 공간에서 24시간 전자동 무인운전으로 슬러지를 탈수한다. 사용 전력은 2~5kW이고 1~4 rpm의 저속으로 스크류가 회전하기 때문에 경비 절감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 펩콘, 유해가스·세균제거 공기청정기 개발

담배연기와 먼지 등 입자성 물질은 물론 유해가스 및 세균까지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대덕밸리 환경벤처기업인 펩콘(www.air-green.com 대표 김동현)은 기존 공기청정기의 정화기능인 담배연기와 먼지 등과 같은 입자성 물질을 제거함은 물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인 VOC(Volatile Organic Compound)를 분해해 처리하고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등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광촉매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시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전기집진기식 공기청정기로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이번에 선보인 광촉매 공기청정기는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 me)의 주요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 환경제품이다. 담배연기와 먼 지는 물론 실내공간의 가구, 복사기, 카펫트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 기화학물질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 유해성 세균을 분해하거나 박멸해 거 의 완벽하게 청정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 안양천 지류에 우·오수 분리관 설치

경기도 안양시 비산3동 안양천 지류인 내비산천에 우·오수 분리관이 설치된다.

지난 3월 9일 시(市)에 따르면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5억2천500만원을 들여 비산3동 군부대에서 학의천을 거쳐 내비산천으로 연결되는 2천800m 구간에 우·오수 분리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빗물은 하천으로,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나가 안양천 수질개선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 낙동강 수계 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완충저류시설 90여개를 내년 중 신설키로 했다.

지난 3월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폐수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수질보전을 위해 낙동강 수계 산업·농공단지 90여곳에 완충저류시설을 새로 확충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99년말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산업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화에 앞서 기존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중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산업·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부지여건, 폐수배출실태, 방류수계오염실태 등을 조사해 최종 설치대상지를 선정키로 했으며 내년말까지 산업단지 20개소를 포함 총 90여개의 완충저류시설을 확충하는데 총 8억1천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 대기환경기준 강화…경기도, 개정안 상반기 시행

경기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치보다 강화된 자체 대기환경기준을 마련, 올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으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3월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 등 도시지역 22개 시·군이 1권역으로, 양평·가평 등 도농복합지역 9개 시·군은 2권역으로 각각 구분돼 아황산가스·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미세먼지·오존·납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권역별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됐다.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치는 1권역 0.04ppm, 2권역 0.03ppm으로 정부의 환경기준치(0.05ppm)에 비해 강화됐고,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도 1권역 0.015ppm, 2권역 0.01ppm으로 정부 기준치(0.02ppm)보다 높게 설정했다. 또 미세먼지 기준치도 권역에 따라 하루 평균 70~140㎍/㎥로 정부 기준치(150㎍/㎥)보다 강화됐다.

도는 이 같은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